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제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포용없는 회복은 없다 격차 해소에 역량집중”

文 대통령, 靑 국무회의 주재
소상공인·자영업자 어려움 해소
취약계층 소득지원 강화의지 표명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포용 없이 회복과 도약을 이룰 수 없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 해소와 함께 취약계층 소득 지원 정책 강화 의지를 표명했다.

전날(1일) 문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상생연대 3법(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의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한 연장선에서 나온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가 1년 이상 장기화되며 전 세계가 모두 힘겨운 시기를 건너고 있다. 하지만, 아직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넘어야 할 산과 건너야 할 계곡이 많이 남아있다”며 정부 부처와 공직자들에게 “마음가짐을 보다 새롭게 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과감한 도전 ▲혁신적인 자세 ▲포용적인 자세 등을 정부 부처와 공직자들에게 요구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과감한 도전’과 관련, 일본 수출 규제 당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자립화로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들어낸 점, 코로나 위기 가운데 ‘성공적인 방역 모델 구축’, ‘제조·수출 강국 위상이 높아진 점’,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룰 나라로 주목받는 점’ 등에 대해 언급하며 “두려워하는 자에게 승리는 주어지지 않는다. 위기에 정면으

로 맞서 대응할 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더 큰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올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회복’은 단순히 과거로의 복귀가 아니다. 미래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회복”이라며 “혁신 없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없다. 제조혁신 없이는 제조강국을 꿈꿀 수 없고, 기술혁신 없이는 미래로 도약할 수 없다. 규제 혁신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에서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는 2년 만에 수수차,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발전을 촉진하며 뚜렷한 경제적 효과를 내고 있다. 혁신의 속도를 더 내야 한다”며 “위기 극복의 과정이 혁신의 과정이 된다면, 위기의 시간이 곧 기회로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적인 자세’와 관련 각 정부 부처에 “포용이 회복과 도약의 토대임을 분명히 하고, 불평등과 격차 해소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마련한 한국판 뉴딜 정책과 2050 탄소 중립 선언 추진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 지역, 산업이 없도록 포용적 전환을 이뤄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의 정책에서 ‘포용성 강화’ 방향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삶을 든든히 책임지는 역할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또한 정기적으로 ‘포용성의 강화’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점검하는 체계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양파·마늘 자조금 ‘경작신고제’ 추진

농식품부, 농산물 값 안정 기대

양파와 마늘 자조금 단체가 재배면적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경작신고제를 추진키로 해 농산물 가격 안정과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양파·마늘 의무 자조금 단체의 경작신고 의무화 안건이 가결됐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2월 승인했다고 밝혔다.

농수산자조금법에 따라 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는 관계부처 장관 승인을 받아 해당 품목의 생산·유통에 대해 경작 및 출하 신고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농식품부와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해 7월 자조금 단체 출범 이후 경작신고에 대한 지속 논의와 현장 설명회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지난 1월29일~2월1일까지 서면으로 진행된 대의위원회에서 양파와 마늘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양파·마늘 재배농가가 의무적으로 경작신고를 하도록 결정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4차지원금 공식화... “민생에도 백신 필요”

이낙연 민주당 대표, 교섭단체 연설
맞춤·전국민 포함 재난지원금 구상

“기존 복지제도의 축적 바탕으로
사회안전망 혁신적 재구축해야”
P코로나 ‘국민생활기준 2030’ 제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4차 재난지원금 구상을 공식화했다. 코로나19 위기가 길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적자 재정 편성 우려에도 민생 경제 회복에 집중하기로 한 셈이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지난해 1월 20일 나온 이후 사람들의 일상이 바뀌었고, 민생 경제가 어려워지는 점 등을 언급하며 4차 재난지원금 마련 구상에 대해 밝혔다. 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할 것이라고 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대표가 밝힌 4차 재난지원금 구상에는 ‘맞춤형’과 ‘전 국민 지원’ 방안이 포함돼 있다. 다만 전 국민 지원 방안은 야당과 협의로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재난지원금 지원 방식을 두고 여야 간 입장차가 있기 때문에 풀이된다.

이 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백신 접종이 시작돼도 경기가 금방 나아지지는 못한다. 서민들은 회복 과정도 늦어질 것”이라며 “코로나처럼, 민생과 경제에도 백신과 치료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우리는 연대와 협력으로 코로나 방역에 성공했다. 이제 민생과 경제 회복에서도 성공해야 한다”며 ▲영업제한 손실보상제 ▲협력이익 공유제 ▲사회연대기금 조성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영업제한 손실보상과 관련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공공 필요에 의한 제한은 정당한 보상을 지급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해야 한다’는 헌법 23조 내용을 언급하며 “손실보상제는 헌법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해서도 “협력해 이익을 만들고, 그 이익을 부분적으로 공유하는 지속가능 모델”, ‘세제지원을 포함한 인센티브 강화’, ‘ESG(환경, 사회 기업 지배구조) 활용’ 등 다양한 실행 방안을 언급했다.

이어 사회연대기금 조성과 관련 지난 2015년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관련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및 이명박 정부 당시 은행에서 ‘새희망홀씨’ 상품을 만든 점을 언급하며 “‘상생과 포용’에서도 세계적 선도국가가 되자”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존 복지제도의 축적을 바탕으로 경제·사회적 변화에 맞게 사회안전망을 혁신적으로 재구축해야 한다”며 포스트코로나 시대 신(新)복지제도로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했다.

그는 “경제·사회구조의 변화는 이미 세계로 확산됐다. 역대 정부가 쌓아 올린 복지제도의 기반 위에 높아지고 다양해진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야 하고, 기후 위기와 플랫폼 기술이 가져온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며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이 대표가 제안한 ‘국민생활기준 2030’은 최저기준과 적정기준 등 두 가

지 축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대표연설에서 ▲아동, 청년, 성인, 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소득지원 ▲포괄적인 돌봄과 의료 보장 제도 도입 ▲차별 없는 교육 서비스 제공 ▲소외 없는 생활 체육 및 문화 생활 보급 등을 제안했다. 이어 관련 제도의 구체화를 위한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 설치 계획도 밝혔다.

이 밖에 이 대표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관련해 “한·미동맹은 ‘바이든 시대’에 더욱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야 하고, 발전할 것”이라며 “‘바이든 시대’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도 진전되기 바란다. 바이든 정부도 한국의 역할을 중시하면서, 남북대화를 지원하고 협력하길 바란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올해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이라며 “분단 70년, 불신과 대결의 역사를 신뢰와 공존의 역사로 바꿔야 한다. 언제 어디서든 만나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에 북한이 호응할 때”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 대표는 최근 정치권 이슈로 떠오른 정부의 북한 내 원자력발전소 건설 추진 의혹에 대해선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린 시기에 국무총리로 있을 때) 제가 기억하는 한,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원전은 거론되지 않았다.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한 USB에도 원전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을 겨냥해 “넘어서는 안되는 선을 넘었다. 야당은 거짓 주장에 대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며 “거짓을 토대로 대통령을 향해 ‘이적행위’라고까지 공격했다면,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민족의 문제에 대해서까지 거짓을 서슴없이 말하고, 거짓을 토대로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정치의 신뢰를 손상하며 국기를 흔드는 위험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최영훈 기자

산업데이터 표준개발 등에 124억 지원

국표원, 신규지원 R&D사업 공고

국가기술표준원은 데이터 활용 기업의 산업데이터 융합·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도 산업데이터 표준화 및 인증지원’ 신규 R&D 사업을 3월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표준이 데이터의 가공 및 서로 다른 데이터 간 교환·결합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올해 신규 편성됐다.

올해는 표준 개발과 실증체계 구축 역량이 확보돼 있어 신속한 성과창출이 가능한 자율주행차·스마트제조 분야에 우선 적용, 2021~2024년까지 산업데이터 상호운용을 위한 표준개발 등 총 3개 과제에 124억원이 지원된다.

우선 차량-차량, 차량-인프라가 생성하는 데이터의 표준화 및 실증을

위한 과제에 49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서울과 대구 등 전국 4개 자율차 실증단지 간 자율주행차 관련 데이터의 연계와 지역 간 호환성 확보를 위한 표준을 개발하고, 개발된 표준을 기반으로 생성된 데이터를 4개 이상의 실증단지에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에 적용해 검증한다.

아울러 산업데이터 교환에 필요한 표준의 개발과 실증을 위한 과제에 55억원을 투입해 산업데이터 표준을 개발하고, 개발된 표준의 효과를 솔루션이 설치된 실제 제조라인에서 검증한다.

또 기업 중심의 표준화·실증·활용 생태계 구축 등 성과확산에 20억원을 투입, 매년 표준화·실증 추진 기술분야 발굴과 데이터 간 연계를 강화키로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고용부, 후보기업 접수

고용노동부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늘린 ‘2021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100곳을 선정하기 위해 2월 한 달간 후보기업 추천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은 2018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에스피엘주식회사, 롯데글로벌로지스, SK하이닉스, 한화시스템 등이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됐다. 이들 기업은 1년간 기업당 평균 150명의 고용을 창출했고, 이직률과 기간제 노동자 사용 비율도 전체 기업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었다.

고용부는 올해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을 위해 이달 28일까지 지방노동관서와 국민들로부터 직접 후보기업 추천을 받는다. 국민 추천 참여는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 홈페이지에서 추천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제출하면 된다.

/세종=한용수 기자